

무단협 1519일째  
타임오프해지 451일째  
지명파업 346일째

발행인 김연국  
편집인 하우신  
편집승인분  
주소 서울 마포구 성인로 255  
MBC미디어센터 11층  
TEL 02-789-3881-6  
FAX 02-782-0135  
www.mbcunion.or.kr  
트위터@saveourmbc  
2017년 3월 15일

# 문화방송 노보

NATIONAL UNION OF MEDIA WORKERS MUNHWA BROADCASTING UNION



## 마연된 박근혜 다음은 짐장경이다!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짓밟은 장본인들은  
여전히 반성을 모릅니다

사진제공  
<미디어오늘>



### 민실위·기자협회·영상기자회 공동 '대선 보도 감시단' 출범

현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어 대선 정국의 막이 올랐다. 5월 대선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각 정당의 후보 선출 과정부터 공식 선거운동과 투·개표까지 숨돌릴 틈 없는 일정이 다가온다. 정치권과 유권자 모두 경험해보지 못했던 조기 대선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극우 세력의 사유물로 전락한 공영방송 MBC로서는 이번 대선 정국이 회생의 '골든타임'이다.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준

엄한 민심 앞에서도 왜곡과 편파보도로 일관한다면 MBC 재건의 염원도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 보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감시와 비판이 요구된다.

노동조합 민실위와 MBC기자협회, MBC영상기자회는 공동으로 '대선 보도 감시단'을 구성했다. 120여명의 취재기자와 영상취재 기자들이 오는 20일(월)부터 공식적인 모니터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공명선거 실현과 유권자의 최선의 선택을 돋기 위한" 〈MBC 선거방송 준칙〉에 따라 "공정성", "객관성", "정확성", "부정적 선거 행태 철저감시" 등을 기준으로 대선 보도를 모니터할 계획이다. 근거 없이 특정 후보 진영이나 정파를 비호하거나 비난하는 편파·왜곡 보도, 선거 보도를 회사 경영진의 안위에 이용하는 '뉴스 사유화' 등을 철저히 감시하고 기록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이근행, 한학수 등 PD·기자 7명 또 보복 인사

## 탄핵 선고 30분 전 기습적 인사 단행 몰락을 앞당기는 김장겸 MBC의 폭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현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를 30분 앞둔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 김장겸의 MBC가 사원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 발령에서 김장겸은 무려 7명의 PD와 기자들에 대해 다시 학살을 자행했다. 대표적인 유배지인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 발령낸 것이다. 부당전보된 대상자는 임채우, 이근행, 한학수, 허태정, 이정식 PD, 그리고 김수진, 김민욱 기자이다. 인사발령 직전까지도 소속 국장과 부장조차 발령 계획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악명 높은 구로 유배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는 악명 높은 '유배지'이다.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에 대한 대량 인사 학살이 한창이던 2014년 10월, 또 다른 유배지인 신사업개발센터와 함께 갑자기 신설됐다. 김주하, 이재훈, 허유신, 김병현 기자와 강효임, 황순구 PD 등이 이곳으로 쫓겨났다. 이후에도 방송기자연합회장을 지낸 전동건 기자, 사측에 항의하는 글로 정직 6개월을 받았던 이용주 기자가 이곳으로 축출됐고, 박광운, 양효경 기자와 박상언, 임채원, 이창호 PD가 추가로 이곳으로 쫓겨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집요하고 반복적인 보복 인사의 피해자이며, 한 차례 이상 법원의 부당전보 결정을 받았던 이들이다.

경영진은 부서 신설 당시부터 사무실을 상암동 밖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했다. 명분은 "회사 밖에서 회사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고 수익모델을 개발하라"는 것이었다. 그

러나 이를 끝이곧대로 믿는 이는 경영진 스스로를 포함해 아무도 없었다. 경인지사 수원, 인천, 일산, 성남총국에 이어, 광화문의 신사업개발센터와 함께 방송제작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상암동에서 차로 50분 거리의 구로디지털단지에 새로운 원거리 유배지를 신설한 것이다. 상암동에 모아두지 않겠다는 의도였다. 결과적으로 유배지를 위한 원거리 사무실 유지에만 월 수백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 부서는 초기에 모바일 콘텐츠를 기획해 수익 모델을 찾는 업무를 수행했지만, 회사의 예산 배정은 거의 없었다. 결국 외부 협찬 등으로 예산을 따내도록 내몰렸고,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의 유의미한 성과나 노하우 축적 등은 거의 없었다. 단적으로 올해 이 부서에 배정된 제작 예산은 0원이다.

###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끝없는 부당 전보

이번에 축출된 7명의 기자, PD들 가운데 이미 부당전보로 현업에서 배제된 이들이 5명이다. 이근행 PD는 2010년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김재철 전 사장 선임에 반발해 파업을 이끌다 해고되었던 인물이다. 한학수 PD는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을 파헤친 MBC의 대표적 스타 PD로, 복직 이후에도 제작 현장에서 배제되어 왔다. 두 사람은 모두 비제작 부서인 송출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특히 눈에 띠는 인물은 이정식 PD이다. 2012년 파업

당시 PD연합회장을 지낸 이 베테랑 PD는 대통령 탄핵 정국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던 중 돌연 제작 중단을 지시받고, 이번 인사에서 축출되었다.

노동조합원들을 주요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려는 의도도 다시 드러났다. 2012년 파업 이후 사측은 보도와 제작 현장뿐만 아니라 정책, 예산, 인사 등 경영 핵심 부서에서 노동조합원들을 철저하게 축출하고 배제했다.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던 조합원인 인재개발부의 이경빈 차장이 이번 인사로 사업국으로 쫓겨났다. 이로써 정책, 예산, 인사 부서에는 조합원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다.

### 극우 선전매체를 자임한 공격적 보직 인사

앞서 이달 초에 단행된 보직 인사에서는 불공정 보도의 주범들이 전면에 승진 배치되었다. 보도국장에 임명된 문호철 국장은 정치부장으로 수많은 왜곡, 편파 보도를 자행한 주범이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MBC 노조탄압 청문회' 의결을 비난하며, 야당을 비판하는 감정적 기사를 무더기로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불법 파업'이라는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2012년 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으로 왜곡하기까지 했다.

시사제작국 부국장이자 <100분 토론>의 담당 부장이 된 박상후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의 조급증이 화를 키웠다'는 리포트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문제 인물이다. 박 씨는 극우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의 게시물을 사내 게시판으로 퍼나르는 등 극단적인 이념 편향을 보여온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과연 공영방송 토론프로그램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김장겸 사장 취임 이후 MBC는 극우파 선전매체로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번 인사발령은 그 폭주가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이 폭주를 멈춰 세우고, 책임자를 단죄해야 한다.

## '현재 불복' 박근혜 '법원 불복' MBC 법원의 '부당전보' 결정 거듭 무시한 인사 학살

닮았다. 현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박근혜,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MBC. 사법부의 잇따른 부당징계·부당전보 확인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장겸 MBC는 똑같은 유형의 위법행위를 또 저질렀다. 말로는 법과 원칙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사법부를 무시하고 불법 행위를 악질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 유배지인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구로디지털단지 위치, 이하 '구로')로 부당 전보된 구성원 7명은 모두 시사교양PD와 기자들이다. 대부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현업에서 배제돼 있다가 또다시 부당 전보를 당했다.

8대 노조위원장 출신 이근행 PD는 김재철 사장 선임에 반대하며 39일 파업을 이끌었다가 해고됐다. 이후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됐지만 제작 업무에서 배

제돼 DMB 송출실에서 근무하다 급기야 이번에 구로로 배치됐다. 2005년 '황우석 사태'를 특종 보도했던 한학수 PD도 마찬가지다. 2012년 파업 직후 부당전보, 대기발령, 신천 교육대 등의 탄압을 거쳐 지난 2014년 신사업개발센터(광화문)로 유배당했다. 이후 부당전보 발령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본래 현업과 무관한 송출실로 쫓겨났고, 다시 이번 부당전보 인사로 구로로 축출됐다. 이정식 PD는 지난해 12월부터 탄핵 관련 다큐멘터리를 준비해오다가 돌연 제작 중단을 지시받은 뒤 부서에서 아예 방출되었다. 임채우 PD 역시 지난달 말 김장겸 사장의 취임에 항의하는 피케팅에 참여한 이후, 구로로 쫓겨났다.

2012년 파업 이후 사측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구성원들에 대한 반복적 부당전보는 지금도 계속되

고 있다. 170일 파업 당시 동료들과 함께 피케팅과 1인 시위, <제대로 뉴스데스크> 제작활동 등에 참여했던 김수진 기자와 김민욱 기자 역시 대기발령, 신천 교육대, 경인지사 등의 과정을 거쳐 현업과 무관한 부서에 4년째 배치됐다가, 이번에 다시 구로에 강제 발령됐다.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담당하다 사측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대법원까지 '부당징계'라는 판결을 받아낸 안혜란 PD는 심의국으로 축출됐다. 부당 징계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고사하고, 유능한 기자와 PD들을 다시 현업에서 쫓아낸 것이다.

지난 5년간 MBC 구성원들에게 가해진 부당인사와 부당징계 등을 바로잡기 위해 제기된 소송은 사건 별로는 22건, 재판으론 총 46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노동조합이 35개의 재판에서 이겼으며, 5개는 진행 중이다. 승소율 89.7%이다.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MBC 경영진은 판결을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다. 오히려 김장겸 사장 취임 이후 더욱 악질적인 위법 행위로 역주행을 거듭하고 있다.



# 〈MBC 스페셜〉 ‘탄핵’ 편 돌연 불방 담당 PD는 ‘유배지’ 구로로 축출

지난 13일 밤 방송 예정이었던 〈MBC 스페셜〉 ‘탄핵’ 다큐멘터리가 불방됐다. 지난달 28일 김현종 당시 편성제작본부장이 이 프로그램의 방송 편성을 갑자기 취소시켰다.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촬영이 시작돼 상당한 준비가 진행되었던 아이템이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방송 기획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취재를 담당한 이정식 PD는 지난해 12월 담당 김진만 다큐멘터리 부장과 김학영 콘텐츠제작국장에게 아이템 제작을 보고했다. 담당 부장과 국장은 “김현종 본부장이 제작을 승인했다”며 제작 진행을 지시했다. 그런데 돌연 2월 28일 김현종 본부장이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제작 중단을 지시했다. 그러다가 곧바로 “보고받은 기억은 있지만 승인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이는 방송사 구성원이라면 누구라도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의 MBC 상황에서 ‘탄핵’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 준비가 본부장에게 보고도 없이 3개월 가까이 진행되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 후임인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은 “(김현종 전임 본부장으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것이 없으며, 본인도 이 아이템의 방송을 승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방송사라면 ‘탄핵’과 같은 전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상대사보다 한 발 앞선 편성을 고민하는

것이 경영진의 의무이다. 무엇이 두려워 시사도 하지 않고 서둘러 방송 제작을 막았는가? 방송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오늘 〈MBC 스페셜〉은 ‘탈북자의 귀농’(사진)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다.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담당 이정식 PD는 지난주 인사발령에서 돌연 유배지인 구로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 전보 조치됐다.

제작 승인을 거부하고 말을 바꾼 김현종은 2012년 파업 이후 시사제작국장으로서 〈PD수첩〉 작가 전원을 해고하고 PD들을 강제 인사발령 낸 인물이다. 이후 2014년 조직 개편에서 시사교양국의 해체와 〈불만제로〉 등 프로그램 폐지를 주도했다. 그는 탄핵 아이템 불방 임무를 끝으로 최근 목포MBC 사장으로 영전했다.

현정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파면되었다. 방송제작자라면 이 역사적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시사다큐뿐만 아니라 예능과 드라마의 소재로서도 이만큼 극적인 소재는 없다. 같은 공영방송인 KBS는 탄핵 선고 다음날인 토요일 밤 10시 30분부터 〈제 18대 대통령 박근혜 탄핵〉이란 제목의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긴급 편성해 방송했다. 시청률은 5.8%(TNMS 기준)를 기록, 같은 시간대 예능(배틀트립)을 두 배 가까이 상회하는 관심을 이끌었다. 일요일 아침에는 토



론프로그램의 편성을 한 시간 더 늘려 탄핵 이후의 리더십을 다루었다. 역시 4.9%의 시청률을 기록, 일주일 전 같은 프로그램에 비해 1.3%나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SBS와 비교해 보면 MBC의 선택은 더 극단적이다. 11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최순실씨의 재산형성 의혹을 깊이 있게 파헤쳐 10%를 넘는 시청률을 기록, 같은 시간대 프로그램을 압도했다. 연이어 12일, SBS 스페셜은 〈사건번호 2016현나〉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탄핵의 배경과 의미를 짚었다.

결국 MBC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가운데 이 역사적 사건인 ‘탄핵’을 다룬 프로그램은 전혀 없다. 공영방송사로서 역사에 대한 기록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보고받은 적 없다’는 본부장의 한 마디로 3개월을 준비한 프로그램을 언제든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은 방송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MBC 방송강령과 편성규약 위반이다. 현 경영진은 이러한 위법 행위를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다. 대한민국은 이 소수의 극우파 경영진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 [민설위보고서]

〈3면에 이어〉



사저 침거 상황을 다룬 ⑤번 기사에서는 사저가 “분주한 정치 현장”으로 변하고 있다며 지지자들의 집회와 조원진 의원 등 친박 인사와의 교류를 다뤘다. 이후 ⑥번 기사에서는 친박계 혼직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 보좌에 나서며 정치적 재기를 노리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다. 심지어 ⑦번 기사에서는 친박의 구심점인 이정현 의원이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지를 분석하는 기사까지 등장했다. ⑧번 기사에서는 지지자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눈시울을 붉힌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스케치했다.

‘불복’은 ‘신뢰와 원칙’의 이미지와 상반된다. 실제로 다른 언론사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4년 발언을 인용하며 모순된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대해 참여정부가 불만을 표시하자, 당시 박근혜 의원은 “현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민설위원들은 “박 전 대통령을 측은함으로 포장하는 동시에, 선거를 앞두고 친박 세력에는 힘을 실어 주려는 노골적 의도”라면서, “‘불복’ 의도를 희석하고 대신 친박의 움직임 보도는 확대해 박 전 대통령의 정치력 영향력에 인공호흡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5. 무너진 시스템, 총체적 무능

더욱 서글펐던 것은 보도국 내의 역량이나 준비가 현정 사상 최유의 사건을 다루는 특보마저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의 3월 10일 선고는 이미 전달 27일 변론 종결 당시부터 사실상 예고된 일정이었다. 언론사라면 뉴스 특보를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데 보도국이 준비에 들어간 것은 사실상 선고 바로 전날인 9일이었다. 사전 제작물도 그 때서야 부랴부랴 준비됐다.

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 일요일 특보에서도 준비 부족은 여실히 드러났다. 사저 부근에는 이미 며칠 전부터 다른 방송사들이 대규모 장비를 배치한 상황이라 MBC 카메라는 자리도 제대

로 잡기 힘들었다. 이런 미숙한 준비는 뉴스 영상에 반영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사저 앞 골목에도착한 것은 7시 36분 쯤이었다. 이미 7시 28분부터 이동 차량의 카메라 앵글에서는 박 전 대통령 차량 행렬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삼성동 사저 화면을 내보내던 저녁 7시 34분에서 35분 사이 MBC는 신호와 차선을 무시하고 달리는 현장 취재팀의 화면을 내보냈다. 의미 없는 화면을 내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총체적인 시스템의 붕괴 때문이다. 유능하고 경험 많은 기자들을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대거 보도국 밖으로 쫓아냈으며, 뉴스 영상에 대한 컨트롤 타워였던 영상취재부를 보복으로 아예 없애버린 경영진의 행위가 총체적인 무능력으로 드러난 것이다.

지난 며칠 동안 보도부문에서 벌어진 것은 촌극이었다. 준비 부족으로 혀동대는 와중에도, 파면당한 대통령과 그 지지세력을 미화하고 탄핵 불복을 부추기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불복 선언’이라는 핵심 뉴스는 놓치고, 대선과 선거 정국에서 친박의 정치적 재기의 불씨를 지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민설위원들은 “경영진과 보도국 간부들이 탄핵 각하나 기각을 기대하고 있었기에 벌어진 사고가 아니냐”고 평가했다. MBC 뉴스는 탄핵 기각을 기대하고 사저로 돌아갈 준비를 하지 않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